

‘내부자 된 감시자’…원안위, 이제라도 국민 안전 편에 서야



가동 30년 한빛원전 진단한다

6 원전 안전 ‘최후 보루’ 원안위

시정 연장요청 한빛 18건 모두 승인

영광주민 “한수원 거수기” 해체 촉구

정부·의회 제도적 규제 뒷받침 절실

한빛원전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영광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어왔다. 사안에 따라 이따금 영광주민들은 원안위가 있는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몰려가 ‘원안위 해체하라’는 상징 시위로 벌인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원안위의 원전 규제 실패가 도마에 오른다. 원자력진흥 위주의 규제실패 책임을 물어 원안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반복된다. 원전 사업자(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단일 원전 운영, 안전 비용 확대보다는 비용 절감을 공기업임에도 기업 특성상 그 비판이 규제기관인 원안위보다는 가법치 않겠느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광주·전남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민간 원전 전문가들은 잇따르는 한빛원전 고장·사고부터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에 이르기까지 원안위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원전에서의 설비 고장이나 결함, 사고 시마다 규제당국은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규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원안위를 가리켜 ‘한수원의 거수기’, ‘한수원에 면죄부 주는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올해 원안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원안위의 결재 도장은 (위원회나 위원장이 아닌) 한수원 손에 쥐어져있다”고 주장하면서 한수원에 끌려다니는 원안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한수원의 ‘검사 지적사항 조치요구 기간 연장’에 대해 100%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올 9월말 현재까지 3년 동안 한수원이 ‘각종 검사 지적사항 조치요구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119건 있었는데, 원안위는 이중 단 한 건의 반려도 없이 100% 승인해 줬다는 것이다. 원전본부별로는 고리원전 51건, 한울원전 40건, 월성원전 10건, 한빛원전 18건에 달할 정도다.

한빛원전을 품고 사는 영광 주민들은 원전 사건사고 때마다 운영사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안위를 지목한다.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 실추되는 지역 이미지, 급감하는 영광산 농수산물, 급식용 쌀 등 농산물 공급 중단 등을 요정하는 전화 등 주민마다 다양한 걱정거리를 안고 산다.

규제권한과 적지않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도 반복되는 원전 고장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원안위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도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비판의 화살을 원안위가 맞아야 할까.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2편)’와 민간에 있는 원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집에 나온

원안위 개선 방안

① 원안위원 다양성·

전문위원 정치적 중립성 확보

② 지역민 소통·협력 체계 구축

③ 상임위원 비중 확대



보면, ‘원전 규제 실패’의 목소리가 팽배한 배경에는 원안위의 실책이 적지 않지만 입법적, 제도적 미비점 내지 개선점이 한 둘이 아니다. 이는 원안위 스스로 바뀌어나가면 버거운 분야로, 정부와 의회 차원의 뒷받침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원전 규제를 위해서는 우선 원안위 독립성 강화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멀리 않은 시기에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안위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동안 원자력진흥과 육성에 관련한 인사들(관계·학계·연구기관 출신)이 주로 포진해 왔는데, 원전 관련 부서 출신 위원들이 안전이나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원자력계로부터 연구기금 지원을 받는 학계 출신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원전 전문가, 환경단체 등에서는 “특정학교 출신 인사들이 원안위, 한수원을 장악하는데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겠느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원안위 위원들의 근무 형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다수 위원이 비상임위원으

로 운영돼 회의가 열릴 때에만 심의를 하는 탓에 업무 연속성과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문위원의 독립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제도 확보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위원들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면서 원안위의 주요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그 중요성은 간과한 채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는 미비한 탓이다. 위원 가운데 상임위원을 몇 명 둘 것인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등 위원회 개선을 위한 상당 부분은 원안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회 또는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원안위 개선 방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료집에서 ▲상임위원 숫자를 늘리고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전문위원의 전문성·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안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원전 안전에 대해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전 안전성 검증부터 지자체 감시권한 및 주변지역 자원대책 등 시민불신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원안위의 독립성 강화, 주민 신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 것이다.

민간의 한 원전 전문가는 “원안위 체질개선 등 원안위 외부에서 원안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뒷받침도 상당부분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원안위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전문인력을 이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 정책을 펼칠 수는 없었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전문가는 “국내 원전 상당수가 설계 수명의 절반을 넘고 노후화되는 지금부터가 원안위의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원안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원안위가 바로잡고 정부와 국회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원안위, 현장중심 체제개편 시급하다



이정운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기계 기술사

2016년 4월부터 한빛원전에서 불거진 격납용기 철관부식 문제가 조사·확대 과정에서 튀어나온 또 다른 시설 결함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극심해졌다. 돔 모형의 콘크리트 격납건물 내부 철관 부식을 조사하다 보니,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격납건물 자체에 빈틈(공극·부실시공 여파)이 수도무 발견되고 원전 핵심 설비 가운데 하나인 증기발생기 내부에서는 들어가선 안 되는 공구(망치)까지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알고서도’ 은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불러 일으킨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목인 없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잇따라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부터 원안위가 이처럼 무능력한 기관이란 말인가라는 한탄까지. 사안이 불거지면 곧잘 해명에 나서지만, 쉽게 수습이 가지 않는 탓에 원안위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가히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라 부를 만 하다.

원안위는 서울대 강창순 교수가 초대 위원장으로 2대 서울대 이은철 교수, 그리고 현재의 3대 김용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중인데 현 위원장은 공무원 출신이다. 규제권한 자체가 국가에 있으니 공무원 출신이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대체 문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이들 역대 위원장들의 공통점을 보면 학술적인 틀을 벗어나거나 공무원 책상 위를 떠나 본 적이 없는 다시 말해 원전현장의 기를 냄새와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진흥과 안전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영향력이 있던 엘리트 인사들이지,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체험지식이 없는 인사들이라 현장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원전 안전은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 비롯하며 기존의 규정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한빛원전의 사례 몇 가지만 보더라도 원전의 완벽한 안전규정 준수는 회의적이다.

안전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킨다고 한다.

그만큼 어느 정도 보증가능한 수치적 목표를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안전은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현장에서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와 같이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경우, 지난 6월 19에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안보차원의 원자력안전대책의 적용이 필요한 이유이다.

원안위는 안전규제도 중요하지만 안전

현안에 대해 공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에 대한 제3자적 입장을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독립된 규제기관으로서 국민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능력 말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안전수준과 현재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많은 갈등요소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규제 행위의 중요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부가적인 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소통에 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규제지침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한다.

원안위법 1조가 “원자력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보아도, 원안위는 대민부서이며 규제행위의 가장 중요한 상대는 인사를 가진 대통령(청와대)이나 기업인 아닌 국민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원안위를 장관급으로 대통령 직속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의 원안위를 그대로 승격하면 오히려 규제취지가 훼손될까 우려된다. 사전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특하면 7 : 2로 면책성 결의되는 거수결정 행태를 폐지하고 자기분야에 대하여 책임지고 규제를 결정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와 같이 다수의 커미셔너(상임위원, 위원 등)의 대통령 임명) 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원안위·KINS)의 통합도 고려

해볼 만 하다. 원안위(킨스) 전문가들이 독립성을 가진 공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커미셔너(위원)에게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조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안위는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최소한의 사무처만이 남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안위는 원안위와 함께 ▲규제효율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제개편 ▲투명한 국민참여형 대국민 소통기반 규제체계 구축 ▲국가 방사능 재난 방재체계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산도 규제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서 직접 승인받는 정부와 독립적인 예산책정 과정도 개혁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원자력 안전은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6년이 지난 지금도 이웃나라 일본의 전 국민이 방사능 후유증과 공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제대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미래는 없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감평가 25,143,000,000 건물 6008평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평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평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담양군 남면 만월리 만월재바위 도로점
토지 4409평 감평가 30,000,000 최소가 30,000,000

근 린 시 설

▶남구 봉선동 우체국인근
토지 690평 건물 430평 감평가 4,685,000,000 최저가 4,685,000,000
▶서구 농성동 근사거리 도로변
토지 43평 건물 51평 감평가 261,000,000 최저가 261,000,000

일 반 물 건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일 반 물 건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